

신문을 펴면 예산낭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산낭비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이 그토록 예산낭비를 비판하는데 왜 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는 언론이 예산낭비를 건성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예산낭비 타령을 할 뿐 진정 예산낭비를 뿌리 뽑을 생각이 없다. 언론이 예산낭비를 지적한 후 처리결과를 추적하는 보도는 거의 없다. 예산낭비를 주제로 한 탐사보도도 드물다.

또 하나는 언론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확대 보급하는데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언론에는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미담기사는 드물다. 어찌다 예산낭비를 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센터 기사를 신는 정도이다.

심각한 예산낭비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는 「예산 20조 절감」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청사진이 없고 과연 성과를 낼 지 미지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계획하고 성공한 사례를 알리고 다른 곳에도 전파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예산낭비」라는 어두운 면이 있으면 「예산절감」이라는 밝은 면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예산절감」 사례가 널리 퍼질수록 「예산절감」은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되고 「예산낭비」을 한 공직자와 기관은 더 큰 비난을 받게 되며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계약심사”를 주목하자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과를 두고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2003년부터 2008년 5월까지 “계약심사제도”를 통하여 총 1조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강 가양대교를 6개 정도 건설할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예산절감이 사실이라면 큰 뉴스가 될 법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이런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용역·물품 구매를 계약 받주하기에 앞서, 그 산출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시공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여 적정원가를 산출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계약심사사례집』 중 2006년도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동 큰마을

『길 특화거리 조성공사』는 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 5억 6300만 원을 청구했고 계약심사를 한 심사평가액은 4억 9600만 원으로 조정액은 6700만 원, 조정율(사실상 절감율)은 12%였다. 이 사례를 보면 그간 허다하게 문제된 보도블럭 공사에서 비슷한 금액의 낭비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역시 2006년도 사례를 보면 『○○ 동 송배수관 부설공사』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요청액	심사평가액	조정액	조정률
합계	861	706	155	18%

즉 8억 6100만원 공사에 절감액이 1억 5500만원으로 절감율이 18%이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많이 한다. 만약 전체 정부기관이 이 정도 비율만큼 예산을 절감한다면 그 금액은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2006년 1월 감사관실에 계약심사팀을 설치한 울산광역시의 2006년도의 계약심사 실적은 총 230건이고, 1330억 5800만 원의 심사금액에서 예산절감액은 90억 2100만 원으로 절감율 6.8%에 이른다.

마포구의 계약심사제도와 민간전문가 채용

마포구의 계약심사제도도 눈여겨 볼만하다. 마포구는 자치구에서 최초로 건축, 조정, 토목 분야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원가분석 심사팀을 2007년 1월 2일 신설하고 3월부터 계약심사업무를 시작했다.

마포구 심사팀의 특징은 건축, 조정, 토목 분야에서 원가계산 일을 한 경력이 있는 건설업체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와 심사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계약심사팀을 구성하면 어제의 동료가 낸 서류에 「칼질」을 해야 하고, 아는 안면에 냉정하게 일을 처리 못할 우려도 있다. 마포구는 아예 그런 염려가 없도록 민간전문가를 채용한 것이다.

마포구에서 낸 『2007 계약심사 사례집』에 실린 2007년도 계약심사 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심사건수	요청액	심사평가액	조정액	조정률(%)
합계	127	19,747	17,812	1,935	9.8%

마포구의 예산절감 사례중 7000만 원을 심사 요청한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 공사」는 자재 단가와 장비 가격을 수정하고, 조달청 토목공사원가 계산 비율 기준을 반영하여 1562만 7000원을 절감했다. 절감률은 22.32%다.

행정안전부의 시·도 계약심사 부서 설치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

행정안전부는 이런 서울시 등의 사례를 종합하여 2008년 3월 시도별 「계약심사과」 설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 5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을 시·도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계약금액은 약 15조 원으로 지방예산의 15%를 차지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 원가가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계약 심사제도를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절감한 지방예산절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공무원의 재정절약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2003년 처음 계약심사제도를 만든 지 전국에 확대되는데 무려 5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중앙정부의 「계약심사제도」는 없는가

그럼 중앙정부에는 서울시의 계약심사 같은 제도가 없는가? 중앙정부는 수많은 도로와 다리, 댐 등 공사를 발주하고 여러 계약을 체결한다. 이들 공사와 계약은 서울시 계약심사에서 보는 것처럼 원가계산을 점검해도 단 1%도 삭감되지 않을 만큼 완벽할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도 무수하고 그런 예산

낭비를 지적해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심사와 유사한 제도인 「총사업비의 관리」 제도를 살펴보자. 국가재정법 제 50조 (총사업비의 관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21조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건축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으로 정하였다.

2008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토목사업이 649건에 209조 8373억 원이다. 그 중 국토해양부가 594건에 196억 7420억 원으로 가장 많다. 건축사업은 139건에 12조 3797억 원이다. 모두 합하면 788건에 222조 2170억 원이다. 예산규모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50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해두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400쪽이 넘는 두툼한 책자다.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설계 적정성 심사 근거 규정

서울시가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지 5년만인 2008년 7월에 만든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제 57조를 신설해 설계적정성 심사제도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신설한 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 조달청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기관은 그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위 57조 2항은 「제 1항 규정에 의한 ‘설계 적정성 검토’의 대상사업은 관리대상사업이 건축사업인 경우로 한다」로 규정하여 검토대상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올해 7월 처음 만든 위 관리지침 57조에 따라 시범으로 설계적정성 검토 사업을 1건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조달청의 기능 강화 방안으로 재정집행관리와 국유재산관리라는 새로운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기관명칭도 재정관리청(예시)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특히 공공공사의 가격관리 등을 통해 예산 및 재정상황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해 재정집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 한다.

기획재정부는 사전검토를 해서 설계 등에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요청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예산 절감, 민생과 경제회복으로

이명박 정부는 「예산 20조 절감」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오히려 「예산절감」 보다 「감세」에 더 집착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에서 시작한 「계약심사」 방법과 성과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 등에 널리 퍼져 예산을 아끼고 아낀 예산으로 민생과 경제회복에 쓰기를 바란다.